

서울시 '나눔카' 경영난에 급브레이크... 지원책 마련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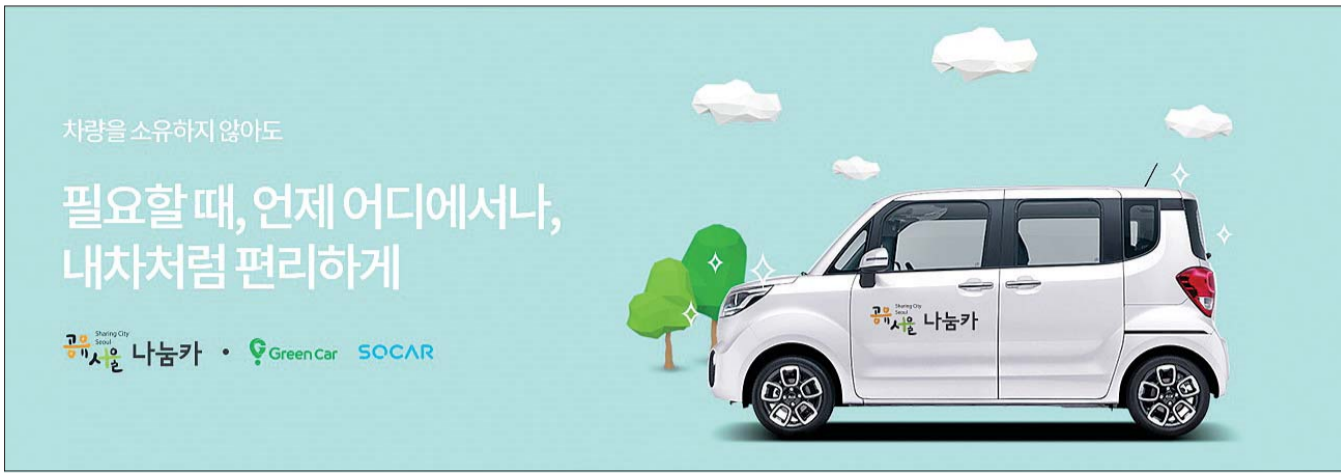
주차요금 중복 감면으로 실효성 낮아 관련 사고 등 책임 전액 사업자가 부담 강남북 불균형·고객 연령차 해소 필요

시민의 만족도가 91%로 높은 서울시 나눔카 사업이 사업자가 경영난으로 운영을 중단하는 등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나눔카 사업자의 절반이 경영난을 이유로 사업을 종료했다. 2기 사업자인 쏘카, 그린카, 에버온, 한카 중 현재 쏘카와 그린카만 운영 중이다.

서울시 나눔카 사업은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언제 어디서나 차를 이용할 수 있는 승용차 공유 서비스다.

지난 2013년 2월 회원 수 6만명으로 시작해 3년 4개월 만인 2016년 6월, 회원수 100만명을 돌파했다. 시는 2016년 5월 4개사와 '나눔카 활성화 2기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듬해 한카와 에버온이 경영난을 이유로 사업을 접었다. 또 쏘카는 2017년 매출액 1211억



서울시 공유서비스 나눔카.

나눔카 홈페이지 캡처

원, 영역비용 1389억원을 기록해 178억원의 적자가 났다. 2012년 이후 5년 연속 마이너스인 상황이다.

시의회는 "서울시가 공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나눔카 사업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2기 나눔카 사업자 중 2곳이 사업을 종료했다"며 "서울시의 나눔카 지원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시는 나눔카 사업자에 대해 주차요금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원 정책이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저공해 자동차를 위한 주차요금 감면 제도와 중복돼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8년 5월 기준으로 주차요금 감면액 3700만원 중 나눔카 감면액은 1600만원으로 저공해차량 감면액인 2100만원보다 500만원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는 "나눔카 사업 관련 사건·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과 소요 비용 전액을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지 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승용차 공동이용(나눔카) 활성화 사업 업무협약서 제17조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시행과 관련해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이때 소요되는 관련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나눔카는 2018년 7월 기준으로 회원수가 234만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16년 97만5000명과 비교해 약 2.4배 증가한 수치다. 하루평균 이용자는 6360명으로 2016년 대비 1.3배 늘었다.

시는 1374개 운영지점에서 총 4775대의 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나눔카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나눔카 사업은 강남북 불균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8월 기준으로 강남구는 145곳에서 341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반면, 강북구는 34곳에서 73대의 차량을 운영하고 있었다. 약 4.6배 가까이 차이나는.

가장 큰 문제는 정책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승용차를 소유하지 않고 공유하는 취지가 무색하게 승용차 보유 현황이 늘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승용차 보유현황에 의하면 2013년 247만9515대에서 2016년 263만8236대로 17만5721대 증가했다.

시의회는 "서울시는 나눔카사업의 운영지점, 차량대수 등에 있어 강남북 균형을 이루고 주 고객인 서울 청년 뿐만 아니라 40~50대 장년층에서 폭넓게 이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재개발 등 정비사업 손실보상 제도 개선 추진

합리적 보상기준 위한 소통 강화 공청회 등 공론화 거쳐 방안 마련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기준 마련을 위해 제도를 개선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정비사업 손실보상 사례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을 진행한다. 용역 내용은 ▲정비구역 내 보상대상자 현황조사·분석 ▲관리처분 인가 이후 이주단계 구역 내 심층 사례조사 ▲관련 법령·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용산삼사, 아현동 철거민 비극 등 그동안 정비사업 과정에서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강제철거로 인한 문제와 함께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세입자의 주거권·영업권 보장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적절한 보상기준에 대해 주민과 소



통할 창구가 없어 현장에서 브로커가 활동하는 일도 벌어졌다.

시는 이달 용역을 시작한다. 주민·전문가와 함께하는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상제도 개선방안을 2020년 7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보상금액 결정 과정 시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은 구역을 전담하는 전문가가 대면 설명을 하고, 주민 요구사

항은 주거사업협력센터에서 사전협의체 운영 중 충분히 논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비사업 현장에서 갈등을 지속하고 있는 손실보상이 이번 용역을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상기준 제시와 주민소통 강화방안 및 사전협의체·도시분쟁조정위원회 등 연계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자치구별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책 시행

특화사업 공모 실시... 7곳 선정 각 자치구에 사업비 7억원 지급

버스 승강장의 '미세먼지 프리존', 미세먼지 잡는 광촉매 보도블록 등 일상에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체험형 미세먼지 대책이 서울 곳곳에서 진행된다.

서울시는 '2019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치구 특화사업' 공모를 실시해 성동구와 마포구 등 7개 자치구를 최종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각 자치구에 사업비 7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공모에는 16개 자치구가 사업을 신청했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성동구, 마포구, 양천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 등 7개 구가 최종 선정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IoT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버스정류장·마을버스 대중교통 관련 공기질 관리 등이 있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11월까지 사업 추진을 완료한 뒤 12월 사업 결과를 평가할 예정이다. 시는 미세먼지 특화사업에 대한 자치구의 수요가 높은 만큼 하반기에 추가로 공모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구아미 서울시 대기기획관은 "지역마다 대기오염 배출원이 다른 만큼 그에 맞는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책을 발굴해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더욱 세심한 정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파주 등 3곳 새뜰마을사업 선정

4년간 국비 98억 등 총 140억 투입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의정부시 의정부3동, 평택시 서정동 등 3개 지역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2019년도 도시주거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새뜰마을사업) 대상지에 선정돼 국비 98억원을 지원받는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정결과를 지난달 29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통보받았다고 2일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올해 도시지역 새뜰마을사업 대상지로 총 30개 지역을 선정했다. 새뜰마을사업은 주거취

약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붕 개량, 소방도로 등 주민 안전시설과 상수도·도시가스 설치, 마을카페나 마을 도서관, 공동 육아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지역을 살펴보면 파주시 법원읍은 미군기지 철수로 인한 슬럼화가 심화된 지역으로 폭 4m 미만의 불량도로와 빈집이 많다. 의정부시 의정부3동은 30년 이상의 노후주택 비율이 70%가 넘고 하수도 보급률이 48%인 열악한 지역이다. 평택시 서정동은 30년 이상의 노후주택 비율이 80%가 넘고 열악한 소방도로로 인해 화재에 취약한



경기도 새뜰마을사업지로 선정된 평택서정동의 한 골목길. /경기도

지역이다.

이들 3개 지역에는 2023년까지 4년 동안 국비 98억 원, 도비 11억 원, 시비 25억 원, 자부담 6억 원 등 총 140여억 원이 투입돼 상수도과 공동이용시설 등 생활 인프라가 확충된다. 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와 노후·슬레이트 주택개량, 그리고 문화·복지·일자리 사업 등도 추진된다. /경기=김승열 기자

광역 첫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 교복 지원"

경기도, 보건복지부와 협의 완료 총 사업비 5.4억... 추경예산 편성

경기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과 '다른 시도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을 위해 올해 6월부터 30만원 범위에서 교복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중학교 1학년에 준해 교육을 받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학생과 다른 시도 소재 중학교 및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해 학칙 등으로 규정된 교복을 입는 신입생이다.

이번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5억 4000만 원으로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도는 이달 중 운영지침을 시군과 함께 공유하고, 오는 5월 예정된 제1회 추경예산에 도비 2억 70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도는 앞서 이들 '학생 복지 사각'에 있는 학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지난 1월 28일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해 3월 29일 협의 심사를 완료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지난 2월 박옥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 대표발의로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학부모 등 보호자는 시군 주민센터 등에 신청하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경기도 소재 일반 중학교 신입생은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에 의해 올해부터 교복을 지원 받고 있다. 올해 384억 원의 예산을 들여 12만 7천여 명에게 지원할 계획으로 도와 시군이 각 25%, 경기도교육청이 50%를 부담한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